

윤 대통령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 만기 연장·금리 감면”

비상경제민생회의 주제

“금리 인상 부담 약자에 전가 안돼”

주담대 금리 상승 부담 해소

청년층 선제적 이자 감면

윤석열 대통령이 고물가, 고금리에 시달리는 민생을 행기 위해 현장을 찾아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는 등 팔을 걷어 붙이고 나섰다. 특히, 경제 위기에 사회 취약 계층이 가장 피해를 본다는 점을 강조하며 정부에 보다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14일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금리 인상은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지만, 그 부담이 사회적 약자에게 전가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중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열린 이날 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물가상승 억제를 위한 기준금리 인상이 전 세계적으로 이뤄지는 상황에서 취약계층 채무부담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금융 자원을 충분히 활용해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은행이 전날 사상 처음으로 ‘빅스텝’(기준금리 0.50%포인트 인상)을 단행, 가파른 이자부담 증가로 금융 취약층에 큰 타격이 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즉각 지원책 마련에 돌입했다는 신호를 보내는 행보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우선 “상황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 채무는 대출 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매입해 만기 연장·금리 감면 등을 통해 상환 부담을 경감해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고금리 차입자에 대해서는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통해 저금리로 대출을 전환해 금리 부담을 낮추

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주택담보대출자의 경우 “안심전환대출 제도를 조속히 실행해 대출 금리를 인하하고 장기 고정금리 대출 전환을 통해 금리 상승 부담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청년층의 부담에 대해서는 “연체가 발생하기 전에 선제적 이자 감면, 원금 상환 유예 등 청년 특혜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청년 안심전환대출을 통해 상환 부담을 줄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코로나로 대출이 늘 수밖에 없는 자영업자·소상공인과 부동산 가격 폭등에 불안한 마음으로 내집 마련을 위한 ‘영끌’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한 서민들,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빚을 내 주식에 투자한 청년들 모두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부가 선제적으로 지원하지 않는다면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가 안고 가야 할 사회적 비용은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서민 경제가 무너지면 국가경제의 기본이 무너지는 것”이라며 “다시 한번 고물가·고금리 부담이 서민과 취약계층에 전가되지 않도록 관계 기관은 각별히 신경써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날 열린 비상경제민생회의는 현장에서 국민들의 어려움을 직접 듣고 해법을 고민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담겼다. 앞서 윤 대통령은 “민생 현장을 직접 챙기겠다”고 공언한 지 사흘 만인 지난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경제 부처 장관들과 함께 첫 회의를 열어 불가안정 대책을 집중적으로 논의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는 주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주현 금융위원장,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비롯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이재연 서민금융진흥원장, 최준우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 권남주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등이 참석했다. 또 민간에서는 신용회복위원회·서민금융지원회 고객상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오전 서울 중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열린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담 직원, 금융위 금융발전심의회 청년분과 위원, 금융연구원 연구위원, 진옥동 신한은행장 등이 자리했다.

윤 대통령은 이틀로부터 서민·취약계층 금융 애로 사례를 공유하고, 금리 상승기에 직격탄을 맞게 되는 소상공인, ‘영끌’ 주택 구입자, ‘빚투’ 청년 등의 상환 부담 경감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현장 목소리를 잘 반영해 정책을 다함께 면밀히 준비해나가자”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회의에 앞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창구를 방문해 상담하러 온 시민들로부터 채무상환 애로 등을 청취하기도 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사개특위 잠정합의...여야 동수·민주 위원장

안건은 여야 합의로 처리

여야가 14일 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의 최대 쟁점이던 국회 사법개혁특위 운영과 관련, 잠정 합의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사개특위 위원 정수는 여야 각각 6명씩 동수로 하고, 위원장은 야당이 맡되 ‘안건은 여야 합의로 처리한다’는 내용을 합의문에 넣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권성동,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사개특위 원 구성 협상 관련 회의를 한 자리에서 이같은 내용에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YTN에 출연해 민주당과의 원 구성 협상과 관련, “사법개혁특위 명칭을 수사사법체계 개혁특위로 명칭을 변경하고 (위원은 여야) 6대 6으로 하고,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되, (안건은) 합의처리하는 것으로 변경해서 잠정적으로 합의를 한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부분까지는 잠

정 합의가 됐는데 모든 것을 일괄 타결하기로 했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이 사개특위 잠정 합의도 무효가 되는 것”이라고 했다.

앞서 여야는 제한적인 17일 이전에 원 구성을 마무리하자는 데 원칙적인 합의를 했으나, 최대 쟁점인 사개특위 구성에서부터 팽팽히 맞서면서 협상 타결이 지연돼 왔다.

권 원내대표가 전한대로 여야는 원 구성 협상을 ‘일괄 타결’하기로 한 상태에서 막판 쟁점으로 떠오른 과방위·행안위 배분 문제 등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사개특위 운영과 관련된 잠정 합의도 원점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배제할 수 없다.

이는 양측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 등 언론 관련 정책을 관장하는 과방위를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또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 추진이 이슈로 떠오르면서 행안부와 경찰이 모두 걸린 행정안전위도 막판 쟁점이다. 여야 원내대표는 각각 당 내부 검토를 거쳐 이날 오후 원 구성 협상을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이상민 장관 “행안부 ‘경찰국’ 3개과 15명에 국장은 치안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14일 행안부 안에서 경찰 인사 등의 업무를 담당할 국 단위 조직인 ‘경찰국’ 설치와 관련, 3개 과에 15명 가량을 둘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현재 30명인 경찰 치안감을 한 자리 늘려 행안부 경찰국장을 맡기로 했다.

이 장관은 취임 두달을 맞아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고, 행안부가 수사권 조정으로 권한이 커진 경찰에 대한 관리강화를 위해 신설할 조직의 이름에 대해 “심

플하게 ‘경찰국’으로 할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최종적인 것은 아니라면서 이보다는 실제 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경찰국 신설을 핵심으로 하는 경찰제도개선 최종안을 오는 15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직접 발표할 예정이다.

이 장관은 경찰국안에 ▲인사지원 ▲총괄지원 ▲자치경찰지원 등 3개 과가 생긴다고 소개했다. /연합뉴스

“국정조사” vs “안보장사”...여야 탈북어민 복송 사건 정면충돌

국힘, 문 전 대통령 책임론 부각

민주, 색깔론 규정 조목조목 반박

여야는 14일 문재인정부 시절 발생한 탈북어민 강제복송 사건과 관련해 공방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국회 국정조사 실시와 특별검찰 도입 카드를 꺼내 들며 야권을 향한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다. 반면, 민주당은 여권의 공세를 보수 정권 특유의 ‘색깔론’으로 규정하고, 연일 제기되는 공세를 조목조목 반박하고 있다.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탈북어민 강제복송 사건과 관련, “국정조사와 특검 등 구체적인 대책을 검토하겠다”며 “정치 권력을 위해 인간의 생명을 이용한 이 사건의 실체를 밝히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책임론도 집중 부각했다. 권 대표는 문 전 대통령이 인권변호사 시절 우리

국민을 살해한 중국인에 대해 ‘따뜻하게 품어야 한다’고 했던 변론 내용을 인용, 이번 탈북어민 강제복송과 대비하며 “인권변호사 문과 대통령 문 중 누가 진짜인가”라고 직격탄 것도 문 전 대통령을 향한 책임 규명 의사를 분명히 했다.

또 안철수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이 사건은 당시 문정권의 북한 눈치 보기의 또 다른 결과물이고, 안보 농단 중 하나”며 “(귀순 의사에 대해) 자의적 판단을 하고, 북한으로 강제추방을 결정하는 불법을 저지른 책임자와 관련자들에게 대해서는 명백한 진상규명과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만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동료 16명을 살해한 뒤 불잡혀 귀순 의사를 밝혔다가 북한으로 추방된 어민을 우리 정부가 보호할 필요가 없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출신인 윤건영 의원은 14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등

에 나와 사건 정황을 소상히 밝히며 복송 어민이 흉악범이라는 점을 내세웠다.

윤 의원은 2명의 선원에 대해 “우리나라로 귀순 하려던 선량한 어민이 아니라 16명을 죽인 엽기적 살인 용의자들”이라며 “(해군에) 체포된 뒤 귀순 의향서를 제출했는데, 당시 정부는 귀순 진정성을 믿을 수 없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또 “16명을 죽인 엽기적 살인 용의자를 대한민국 정부 세 금으로 보호할 것인지 판단해야 했던 것”이라고 부연했다.

청와대 대변인과 국민소통수석을 지낸 박수현 전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이들의 귀순을 인정했을 때의 위험성을 지적했다. 박 전 의원은 “이들이 살해도구를 버리는 등 모든 증거를 인멸한 상황에서 대한민국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해 무죄로 풀려나며 귀순자가 돼 대한민국 국민 속에서 버젓이 살아갈 상황이었다”라고 지적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2022.07.14.

재유행 대비 고위험군의 보호를 위해, 4차접종을 확대 시행합니다

감염시 중증·사망 위험이 높은 50세 이상 연령층은

코로나19 4차접종에

적극 참여해주세요

- **접종대상** | 50세 이상 연령층(1972년생 이전 출생자), 18세 이상 기저질환자 3차접종 완료 4개월(120일)이 경과한 분
- **접종방법** | ① 당일접종(7.18.(월)-) | 카카오톡·네이버 잔여백신 예약 또는 의료기관 우선예약 ② 사전예약(7.18.(월)-), 예약접종(8.1.(월)-) | 전화예약(1339, 지자체콜센터) 사전예약 누리집(<http://ncvr.kdca.go.kr> 대리예약 가능),

*mRNA 백신 접종을 우선 권고하며, mRNA 백신 접종을 원치 않는 경우 노바백스 백신으로 접종 가능
** 18세 이상 기저질환자에 관한 정보는 코로나 예방접종 누리집(ncvr.kdca.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